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569
------------	------

발의년월일 : 2007. 5. .

발 의 자 : 홍 연 아 의 원
외 7인

1. 주 문

-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증가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과 같은 대형 업체는 매출액의 2%, 1.5%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와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체제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제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할 것임.

- 또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임.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중 4명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자영업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어 자영업 양극화를 더욱 더 부추기고 있음.
- 특히 안산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로 어느 지역보다도 중소기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되어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체제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2.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3. 개정 법률안 내용의 입법화는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영세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4.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2007. 5.

안산시의회의원 일동